

# 노동부, ‘쿠팡TF’ 구성… 부당노동·산재은폐 의혹 정조준

계열사 사업장 감독까지 병행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 등 총동원  
플랫폼 고용 모델로 확산 우려도

고용노동부가 쿠팡을 정조준하고 노동·산업안전 전반에 대한 전방위 수사 와 감독에 착수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과 관련한 청문회에서 불법파견, 산재 은폐 등 각종 의혹이 제기 된 데 따른 것으로, 필요시 강제수사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지방청은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합동TF)’를 구성해 수사와 감독에 착수했다. 합동 TF는 산업안전 분야 15명(서울청·서울강남·서울동부·서울북부지청), 노동 분야 17명(서울청·경기청 등 7개청)으로 구성됐다. 고발 사건 수사에 그



노동부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모습.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

치지 않고, 쿠팡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사업장 감독까지 병행하는 등 조사 범위를 대폭 넓혔다.

노동부는 쿠팡CL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을 비롯해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 강요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강도 높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수사 강도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9일 고발사건 제기 이래 미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전 자료 분석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필요시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진실 규명에 역량을 집중하고, 조직적인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 혐의 확인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아울러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3곳과 배송캠프 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야간노동과 건강권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인 개선 강력 권고,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등 실효성 있는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TF 가동으로 쿠팡이 직면한 리스크는 단순한 개별 법 위반 여부를 넘어, 플랫폼 기반 고용·물류 모델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법파견과 산재 은폐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과 과태료를 넘어 대규모 시정명령과 구조 개선 압박

이 동시에 가해질 수 있다.

특히 쿠팡CLS를 중심으로 한 물류·배송 구조가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인력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불가피해진다. 이는 인건비 상승과 운영비 증가로 직결돼 수익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쿠팡을 시작으로 물류·배송·플랫폼 기업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 신호로도 해석된다. 정부가 ‘플랫폼 노동’ 영역을 사실상 제도권 노동·산안 관리 체계로 끌어들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감독을 통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위반 확인시에는 관용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한전, 전통과 혁신 접목한 9대 신기술 공개

CES 2026 참가… 한전관 운영  
‘미래 전기 거북선’ 모티브로 구성

한국전력이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인 CES 2026에서 한국의 전통미학과 첨단 전력기술을 결합한 국가대표 전시관을 선보인다.

한전은 6일~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노스홀에서 열리는 CES 2026에 참가해 ‘한전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전시에서 ‘오늘 만나는 내일의 전기(Power of Tomorrow, Discovered Today)’를 주제로, 한국 고유의 역사·문화적 서사와 미래 전력기술을 접목한 전시 콘텐츠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 대한민국 전력기술의 경쟁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전기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력 밸류체인 전 단계를 아우르는 자체 개발 9대 신기술을 한자리



CES 2026 한전 전시관 전경. /한전

에서 공개한다.

전시는 관람객의 이해와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몰입형 LED 실감 영상 ▲융합형 배너 영상 ▲소통형 키오스크 기술 요약 영상 ▲확장형 QR코드 기반 기술 상세 영상 등 4단계 체험형 구조로 구성됐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안보 등

인류가 직면한 복합 위기 속에서 전기의 역할과 미래 전력기술이 제시하는 해법을 상징적 스토리로 전달한다는 구상이다.

한전은 전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선시대 혁신 무기인 거북선을 모티브로 전시관을 구성했다. 거북선이 시대를 앞선 기술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상징인 만큼,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한전의 에너지 신기술로 극복하겠다는 비전을 ‘미래 전기 거북선’으로 구현했다.

또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업해 대한민국 전통·역사·문화유산이 지닌 혁신의 가치와 서사를 미래 전력기술과 결합한 콘텐츠도 선보인다. 한전은 이번 CES 참가를 단순한 기업 전시가 아닌, 한국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국가대표 전시관’이라는 인식 아래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지난해 농촌생활복합센터 86곳 개소

농식품부,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초점

지난 한 해 국내 농촌 지역에 총 86개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센터’가 들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 중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에 부족한 교육·보육·문화·체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주민의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한다.

지난해 51개 시·군에서 생활 SOC 복합센터 86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복합센터는 작은 도서관, 청소년 쉼터, 문화·체육 공간 등을 갖춘 지역 생활서비스 거점으로 자리잡으며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경기 양평 옥천면의

‘도서문화센터’가 꼽힌다. 연간 약 1만 명이 다녀간 이 센터에선 독서, 방과후 돌봄, 직업교육 등이 제공되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에 참여하는 사례도 있다. 충남 아산 신창면 ‘신창행복누림터’는 주민들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을 맡아 개관 1년 만에 이용객 수 1만 명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을 개편해 33개 시·군, 77개 읍·면에서 신규로 농촌중심지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장터 등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체터 내 프로그램도 다양화한다.

특히 정주 인구뿐 아니라 생활·관계 인구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농촌 재생을



경북 포항시 남구 옥천읍에 조성된 ‘다원복합센터’ /뉴시스

위해 ‘다시온(ON:淵) 마을’ 조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올해 시범지구로 전북 고창·김제, 경남 밀양을 선정했고, 농촌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창업·관광 기능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재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준공 이후 시설 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점검 체계도 개편한다. 지구별 종합 평가지수를 활용해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필요시 컨설팅을 제공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청년농 우대 집적지구 4년 내 140곳 조성

농식품부, 청년농 진입장벽 완화  
사업 대상·지원 범위 확대 추진

정부가 ‘친환경 유기농업을 2배로 늘린다’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사업의 제도 손질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청년농 전용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사업신청면적 및 재무요건의 대폭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친환경 집적지구 140곳을 조성해 생산·가공·유통 전반의 기반 확충을 도모한다.

개편의 핵심은 청년농의 진입장벽 완화 및 사업 대상·지원 범위 확대다. 우선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이 친환경농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른바 ‘청년지구’를 신설한다. 농가 및 사업주체 구성원 중 청년농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조합이 대상이다.

사업신청 요건도 대폭 낮추기로 했

다.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최대 50%까지 완화해 쌀은 10ha(헥타르)에서 5ha로, 원예·가공은 5ha에서 3ha로 줄인다.

신규 사업자가 제출해야 했던 5년간 결산재무제표·영농현황·매출전표 등 서류도 3년으로 줄인다. 청년농에게는 사업선정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해 유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 품목도 크게 늘린다. 친환경 농업기반구축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생산·가공·유통시설을 건축할 경우 사업부지 기반조성비, 설계·감리비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한다. 아울러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비용도 지침에 명문화해 현장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집적지구 조성은 영농법인 또는 조합 등 농업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생산·가공·유통 및 교육·체험시설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구당 20억 원 한도 내에서 국비·지방비를 최대 80%(국비 30%, 지방비 50%)까지 지원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 해수부, 명절 전 ‘선원 임금체불’ 살핀다

지방해양수산청별 점검반 구성

해양수산부가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선원의 ‘임금체불 예방 및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 추석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35개를 점검하고 관리해 13개 사업장, 선원 56명 대상의 밀린 임금 도합 5억2600만 원이 지급되도록 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임금 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만약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한다.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에 대해서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 및 각종 법률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선원 분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밀린 임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악성 체불 사업체는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